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 북한

정형근(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여는 말

최근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기존 사회주의 경제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큰 수정을 가했다. 개혁의 폭과 운영 측면에서 과거 그 어떤 정책보다 획기적이고 그 영향 또한 상부에서 하부까지 크게 미치고 있다. 국내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 외에도 9월에는 신의주를 행정특구로 발표하였고, 11월에는 금강산과 개성을 관광 및 경제 특구로 지정하는 등 대외적인 정책적 변화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최근 핵문제가 다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특구의 실험이 상당한 모험이 되고 있고, 성공을 위한 주변 여건들이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북한의 이번 변화, 과연 개혁과 개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위기 관리 차원에서 계획경제를 정

상화하기 위한 것인가?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과연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위기 모면을 위해서 취해진 정책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개혁과 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 물론 중간의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건너뛸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변화과정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보더라도 대체로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도 과거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도했던 경제개혁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경제체제론적 입장에서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기까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단계적으로 그 정책적 특징과 개혁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비교함으로서 이번 북한의 조치가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시장경제로의 이행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제2절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과정과 경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북한의 7·1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4절에서는 북한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¹⁾

1) 본 논문은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까지 경제정책적 변화를 시도한 것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유럽 경제체제의 경제정책적 변화의 배경 등에 대한 부분은 지면상 생략하고, 당시 경제정책의 변화의 핵심과 정책에 따른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만 논한다.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유형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과정을 본 논문에서는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전통적 사회주의 → 개량사회주의 → 시장사회주의 → 체제전환의 단계로 변화해 왔다. 다음에서는 각 단계별 경제개혁내용에 대해서 논의한다.²⁾

1) 전통적 사회주의

전통적 사회주의는 시기적으로 대략 196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택했던 경제체제이다. 이 시기에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중공업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사회주의에서의 경제체제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었고, 경제의 중앙계획은 당이나 군 또는 경찰기구에 의한 관료행정에 의해 운영되었다. 국가가 생산요소의 배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본수익의 분배 등을 강력

2) 4단계의 분류는 필자의 자의적인 분류이다. 따라서 분류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개량사회주의와 시장사회주의를 하나의 개혁사회주의로 묶지 않는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에 있어서 개혁의 폭과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시장사회주의에서는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가격 형성의 자유와 암시장이 아닌 초보적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개량사회주의와의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북한의 7·1조치와 비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북한은 현재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사회주의에서 취했던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학자들 중에는 중국의 현재의 경제체제를 시장사회주의 체제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중국은 이미 시장사회주의의 틀을 넘어 체제전환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IMF도 중국과 베트남을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IMF의 분류에 대해서는 IMF, *Transition economies :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Nov., 2000), p. 1 참조.

히 통제하였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식 경제개발계획을 모델로 하여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상호경제원조회의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MEA)를 구성하여 회원국들과 보조를 맞추어 경제 발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전통적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간섭과 역할로 인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 시기에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함으로써 재화의 자유로운 가격형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가격이 재화의 희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재화의 가격은 비용을 감안한 가격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경제계획에 의해 정해진 정치적 가격으로 가격구조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restriction)하에 처해 있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영기업들은 그들의 존재를 이윤획득, 경쟁력 또는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과 같은 것으로 합리화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³⁾ 전통 사회주의에서 국영기업들은 수익성보다 물질적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전통적 사회주의에서는 경제구조에 있어서도 산업부문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았고, 산업구조 역시 투자재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경제 전반에 걸쳐 왜곡현상이 나타났다.⁴⁾ 사회주의 초기에는 산업부문의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에 높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향상은 달성하지 못했다.⁵⁾

3) J. Kornai,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Vol. 3(1986), p. 13.

4) J. Kornai, *Economics of Shortage*(Amsterdam, 1980), p. 21.

5) J. Winiecki, "Are Soviet-Type Economies Entering an Era of Long-term Decline?", *Soviet*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처분권과 이용권의 분리로 인해 경제 주체들이 희소한 자원을 아껴 쓰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결여되었다.⁶⁾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하여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증가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국영기업의 입장에서는 계획이행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생산능력 낮추고,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국가에 요청하여 투입(비용)을 극대화하고 산출량을 줄이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다.⁷⁾ 그밖에도 전통적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간 분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이 국제분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동유럽 국가들의 대외 개방도는 상대적으로 높기는 했으나 수출의 50~70%는 코메콘(COMECON)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었고, 서구 선진국과의 무역비중은 단지 15~30% 정도로 낮았다.⁸⁾ 코메콘 국가들 사이의 무역도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고전적 사회주의에서는 대외무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 지도자 또는 계획자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의 부재로 인해 소유권자와 이용자의 분리로 인해 생기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를 해결하지 못했다.⁹⁾ 공유재산을 원칙으로 하는 고전적 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공

Studies, 38. Jg.(1986), Nr. 3, p. 333.

6) M. Kosche, *Eigentumstransformation in postsozialistischen Wirtschaftssystemen*(Köln, 1993), pp. 68~69.

7) 슈레터(Schlueter)는 연성계획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 문제라 한다. R. Schlueter, *Wirtschaftsreformen im Ostblock in den 80er Jahren*(Paderborn, 1988),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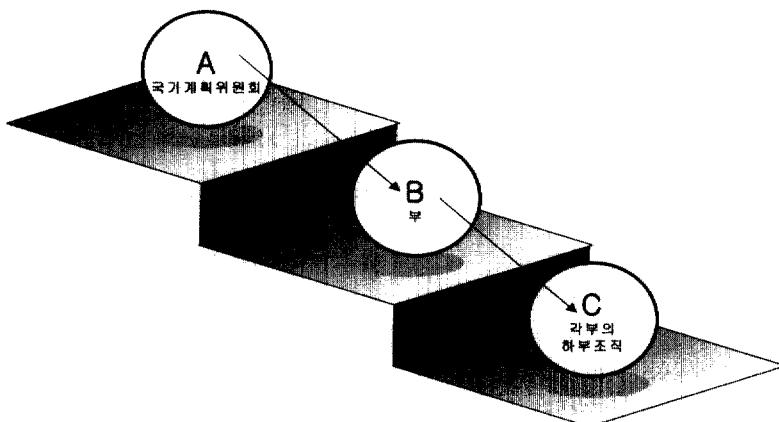
8) 위의 자료는 P. Marer, J. Arvay, J. O'Connor, M. Schrenk, & D. Swanson, *Historically Planned Economics – A Guide to the Data*(Washington D.C., 1992)를 참고로 작성하였음

9) Ch. Watrin, "Vom sozialistischen zum privaten Eigentum", *Hamburger Jahrbuch für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politik*, 35(1990), p. 121.

유재산의 주인인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한다. 대리인으로서 의 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처분과 이용규칙을 만듦으로써 스스로 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어 고전적 사회주의에서는 주인 - 대리인 -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¹⁰⁾ 이러한 문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운영을 위한 행정조직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의 경제를 총체적으로 운영 및 계획을 하는 국가계획위원회(A)는 계획의 작성과 실행에 있어서 그 하부조직인 부처(B)의 주인(principal)이며, 부처(B)는 A의 대리인(agent)이자 동시에 그 하부조직 C의 주인(principal)이다. 이러한 주인 - 대리인 - 문제는 각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상호간의 정보공유의 차이와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주인(principal)의 의도대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다. 물론 중

<그림 1> 주인 - 대리인 - 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10) Hyung-Gon Jeong, *Privatisierungspolitik im Transformationsprozess*(Shaker Verlag, 1998), pp. 32 ~33.

양기구의 통제 강화를 통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통제 역시 많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쉽게 시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북한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은 추가적인 투자와 노동력의 투입 없이 이데올로기 교육만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취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개혁이나 관리개선정책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특히 중공업 위주의 산업육성으로 소비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었고, 국영상점에서 살 수 없는 물건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전형적인 사회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 따라서 시기와 개혁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1950년대 후반부터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수정을 가하는 개혁을 시도했다.

〈표 1〉 고전적 사회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고전적 사회주의	
특징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경제는 정치이데올로기에 종속됨 기업은 국가의 계획명령을 수행하는 단위 생산수단의 국유화, 국가가 생산요소 배분, 경제단위에 대한 직접적 관리 중공업 위주의 발전전략
문제점	국가의 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효율성 초래 행정가격으로 인한 가격구조의 심각한 왜곡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restriction)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불가능 산업부문의 과잉투자로 산업구조의 왜곡 공유재산으로 인한 무임승차(free rider)문제 발생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문제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발생

2) 개량사회주의

(1) 개량사회주의의 개혁 내용

사회주의 국가들은 앞에서 논의된 전통사회주의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사회주의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개량사회주의로 1960년대 이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을 들 수 있다. 국가별로 개혁 내용과 시기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개혁의 유형은 비슷하다. 개량사회주의에서는 국유재산의 원칙과 중앙계획의 원칙 등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제도들과 정치체제는 전혀 개혁하지 않았다.

개량사회주의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지방 정부와 기업에게 부여한 것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 의사결정권에는 기업경영의 자율권과 이윤처리권까지 미미하나마 보장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개혁을 소극적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는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국영기업의 경영자들은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서 권한 자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권한 남용을 통해서 경영자의 이익을 착복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¹¹⁾ 권력의 분산이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체제가 변화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자 이를 두려워한 집권층은 분권화시켰던 권한을 다시 원 상태로 환원하였다.¹²⁾

11) 경영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분석은 P. H. Dembinski, *The Logic of the Planned Economy, The Seed of the Collapse*(Oxford : Carendon Press, 1991), p. 105.

개량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권한의 분권화와 재집권화 등을 추구하였고, 개혁의 사이클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인센티브와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실패하게 되었다. 개량사회주의에서의 개혁은 정부의 직접적인 조정이 다소 줄었을 뿐 체제의 결함을 극복하는 개혁이 동반되지 못해 처음부터 실패가 예상되었다.¹³⁾

〈표 2〉 개량사회주의의 개혁 내용과 문제점

개량사회주의	
개혁 내용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제도와 정치체제의 기본을 유지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방정부 또는 기업에게 의사결정권 부여 소극적 분권화(기업이율 처리권 부여), 계획지표의 축소 중앙정부는 계획에 의해 기업에 책임할당량 제시 양적 생산에 의한 독립채산제 강조
문제점	분권화의 부작용으로 권한 남용 또는 책임회피 현상 속출 → 의사결정권 흰원 인센티브와 경제적 효율성 문제 해결 못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제반 문제점 지속

(2) 국가별 경제개혁 사례

① 소련

소련의 경우는 1960년부터 1984년까지의 경제개혁을 개량사회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 이전까지 소련의 경제개혁은 1957년 후르시초프의 지역경제위원회(Sovnarkhoz) 개혁, 1965년 브레즈네프의 코시긴 개혁, 그리고 1970년대 이후의 중앙집권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953년 이후 후르시초프가 시도했던 개혁은 1957년에 지역경제

12) W. Linder(1989 : 38) 그리고 위의 Dembinski, p. 103 참조.

13) O. Sik, *Der dritte Weg,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Theorie und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Hamburg, 1972), p. 179 참조.

위원회(Sovnarkhoz) 개혁으로 대변될 수 있다. 이 개혁의 핵심은 공업부문의 실적개선을 위해서 지역경제위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당시 공업의 각 부(府, ministry)는 내부에 일종의 제국을 형성하여 관료주의적 지연에 따라서 운영되었고, 자기 관할 영역으로 분류된 기업의 업무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관할지역의 기업이 아닌 타 기업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후르시초프는 기업의 중앙통제권을 100여 개의 지역경제위원회로 이양하여, 분권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은 각 지역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보장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경제를 더 작은 단위로 자급자족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오히려 경제적 성과는 그 이전보다도 미미했다. 이러한 개혁의 부작용에 따라 소련당국은 1963년에 지역경제위원회를 47개로 줄였고, 국가최고경제위원회(VESENKA)를 부활시켰다.

후르시초프의 개혁은 공업부문보다는 농업부문에 더 중점을 둔 개혁이었다. 농업분야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된 사업이 처녀지 개척활동이었다. 이 사업을 위해 국영농장이 적극 나섰으며, 소련 정부도 처녀지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 농업 개혁은 토양의 한계와 기후문제로 인해 수확량이 계획대로 증가되지는 않았다. 농업부문의 개혁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집단농장이 합병되거나, 국영농장화된 것이다. 1940년에 23만 6,900개였던 농장수가 1969년에 3만 4,700개로 감소했고, 동시에 농장당 평균 면적도 500헥타르에서 2,800헥타르로 증가했다.

당시 농업개혁은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의 가격을 인상하고, 농산물의 화폐거래를 허용하였으며,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농민의 임금체계도 변화하여 그동안 현물로 지급해 오던 임금을 부분적으로 루블화로 지불하

였다. 이 개혁으로 농산물의 증가가 한때 7%가 넘었고, 농업개혁 이후 10여 년 동안 농민들의 소득도 크게 증가하였다.

후르시초프가 추방된 후 1964년에 권좌에 오른 브레주네프는 자신의 경제 관료였던 코시긴의 이름을 따서 개혁을 시도하였다. 1965년에 실시된 “코시긴 개혁”的 주요 내용은 기업의 평가방법을 ‘총산출량’에서 ‘판매량’으로 대체한 점이다. 특히 기업의 목표 할당량도 축소하여 과거 20~30개에서 8개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이윤의 일부분을 노동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개혁은 모두 기업경영자에 대한 중앙계획기구의 감시와 통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수많은 개혁지표를 과감히 줄임으로써 기업의 개혁을 시도하였고, 특히 기업들이 이윤과 보너스와 투자권한을 가지고 더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기업들은 과거보다 더 자율적으로 기업운영에 나섰고, 실적을 올리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도 자율성의 남용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련 당국은 다시 일부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앙의 간섭은 많이 줄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앞에서 언급된 8개의 의무지표가 있었고, 기업의 인사관리를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중앙의 기업에 대한 간섭은 여전히 강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기업에게 부과하는 목표가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자율권은 점차 줄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국가의 행정가격으로 가격체제의 왜곡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자율성 확대로 주어진 기업들이 권한을 남용하게 되었고, 생산성 향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도 나타났으며, 실행이 어려운 목표는 아예 회피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소련 당국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분권

화되었던 기업의 권한 중 일부를 다시 중앙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취했다.¹⁴⁾ 당시 계획에서는 기업이 달성해야 할 목표량이 증가하였고, 기업의 인센티브 기금 규모를 정하고, 기업의 주요 목표인 생산물의 계획과 품질향상 등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정부가 이 기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기업들을 하나의 생산체제로 묶는 생산연합체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다시 중앙행정의 기업에 대한 통제강화로 이어졌다.

경제적 의사결정권이 중앙에 의해 통제되면서 경제침체는 지속되었고, 당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의 과학화’, ‘계획의 전산화’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 당국의 목표는 중앙정부의 생산단위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였을 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1965년 코시긴 개혁 이후부터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까지의 소련의 경제개혁은 부분적으로 공장의 생산이율제를 도입하고, 제한적이나마 분권화를 시도하여 기업책임제를 실시하고, 사유재산을 일부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개혁의 내용과 폭이 미미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② 형가리

헝가리의 경우는 1968년 1월 1일 “신경제 메커니즘”이라는 구호하에 시도한 경제개혁을 개량사회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경제 개혁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경제기구들은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그 누구와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간 경제계획이나 장기 5개년 경제계획은 기업

14) 이러한 문제는 소련이나 동독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당시의 경제계획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큰 틀만 작성하고, 기업차원의 세밀한 계획은 기업에게 위임하였다. 기업의 이윤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이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세분화된 생산목표를 폐지하고, 물자공급도 중단하였으며, 기업간의 거래를 허용하였다. 제한적이나마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였고, 사유재산도 일부 허용하였다.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유가격과 최고가격 그리고 고정가격으로 구분하고, 고정가격(소비재의 75%, 생산재의 30%)의 경우만 국가가 통제하였다.

모든 경제기구들은 개별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계획은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국가의 계획과 일치하도록 했다. 기업과 가계는 그들의 계획과 행동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비록 정부가 통제하고 영향은 미치지만)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주로 조세, 이자율, 임금, 환율 및 가격 정책과 화폐 및 재정 정책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경제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과 행정적 수단은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의 통제 및 조정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경제개혁의 결과 만성적인 소비재의 부족 현상은 다소나마 해결이 되었으나, 경제성장에 기여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③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의 개량사회주의는 1952년 “준(準)분권형 노동자 관리사회주의”가 실시되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부터 노동자가 기업의 관리주체로서 나서게 되었으며, 참다운 노동자의 자주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업의 운영이 중앙기구로부터 분리되도록 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이념 자체는 존중하되 경제분야에서는 이미 1950년대 초반부터 시장경제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초기부터 농업부문의 집단농장화를 포기하고 농업의 대부분을 개인적 소유에 위임하였다. 특히 종업원 5인 이하의 수공업체에 대해서는 사적 운영을 허용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1952년 1월에 「계획관리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 과거와 같이 위로부터의 계획에 따른 명령체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권을 가지고 자주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적 기업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업들은 최저조업률, 생산 계획량, 의무조업에 필요한 임금기금, 고세의 평균율, 예산, 국가로의 납부금 등을 스스로 정해야 했으며, 이 계획의 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의 직접 간섭이 가능했다.¹⁵⁾

기업의 경영 분권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구는 노동자평의회, 관리위원회, 그리고 기업장이었다. 노동자평의회는 기업의 기본 계획과 결산을 승인하고 기업의 관리와 경제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구였고, 관리위원회의 맴버를 선출하고, 해임하며, 교체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었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의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월간조업계획, 기업 내부의 편성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증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기구였다. 기업장은 기업의 운영과 업무를 직접관리하며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조직을 토대로 경제운영이 분권화되었다.¹⁶⁾ 유고슬라비아는 1954년에는 이윤분배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손익계산 방식이 소득원리로부터 이윤원리로 변화하게 되었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비용, 특히 임금도 낮추어야 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주관리에서는 노동자는 기업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인상과 비용감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순이

15) 김광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경제시스템”,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rategy*, Vol. 25, 『승실경영경제연구』, 제25집(1995), 15쪽.

16) 위의 글, 16쪽.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임금과 이윤 분배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도 하였다.¹⁷⁾ 기업은 제품의 가격형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었다.

투자분야에서도 분권화가 이루어져서 국가예산으로부터 무상으로 배분되었던 것이 사회투자기금의 대부금 형태로 기업에게 융자되었다. 사회투자기금은 국가예산에서 독립된 기금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대부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나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간섭이 많아 1964년에 이 기금이 폐지되고 투자은행, 무역은행, 농업은행 등으로 분리되었다. 1952년에 국가예산을 분리하여 재정의 분권화를 실시하였다. 이로서 사회보장이나 투자기금도 정부의 예산에서 독립되어 기금으로 이동하였다.

④ 동독

동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일찍 인식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나타나고 생산성이 떨어지자, 동독은 먼저 1958년부터 이데올로기적 교육을 강화하여, 투입량의 증가 없이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이로 인해 동독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어 갔으며 심지어 상당수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따라서 동독 내에서 주민들의 불만해소 차원에서라도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동독 정부는 1963년에 “신경제체제”라는 구호하에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950년대의 경제개혁이 경제체제의 통제와 지도 조직의 부분적 변화

17) 위의 글, 18쪽.

인 데 반해, 1960년대에 시도한 “신경제체제”라는 개혁은 계획과 통제체제를 폭넓게 수정하는 개혁이었다. “신경제정책”은 소련의 리베르만 방식을 수용하여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였고, 중앙정부의 계획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도되었다. 당시 개혁의 특징은 첫째, 국가가 더 이상 기업들에게 세부적인 계획을 시달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 경제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각 기업체의 이윤을 근거로 하였으며, 셋째, 경제적 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가격제도를 시도한 것이다. 특히 1964년부터 1966년 사이에는 원자재,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의 가격설정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였고, 기업의 자율성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은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먼저 정부 차원의 중앙계획과 기업이 달성한 성과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1969년과 1970년에는 기업의 성과는 과거와 같이 계획량 달성을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벌어들인 수익에 따라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을 대부분 가격이 유리한 제품의 생산체제로 전환하였고, 이로서 정부 차원의 중앙계획의 달성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신경제체제의 개혁 프로그램은 개인과 기업의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기업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권한이양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원칙과 경제계획의 원칙은 그대로 고수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나 재화의 희소성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생산이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분권화로 인해 권력에 있어서 심각한 누수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SED 정권은 권력을 다시 중앙으로 집중시켜 계획경제로 회귀하였다.¹⁸⁾

1971년에서 1975년 사이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이미 그 이전

에 계획했던 분권화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중앙정부에 의한 국민경제계획을 추진하였다. 1971년부터 모든 기업들은 다시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기업의 할당량을 배정받게 되었고, 과거와 같이 계획량 달성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경제계획이 다시 과거의 모습대로 바뀌게 되자, 사회주의적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 내적 문제 외에도 1973년의 오일 쇼크 이후 국제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동독 경제는 더욱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SED 지도부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6년부터 1980년 사이에 계획경제체제의 정비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였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 가격개혁(가격조정)과 임금체제의 변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단지 체제 내적으로 미미한 변화였을 뿐이며, 계획경제 체제의 변화나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인해 발생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변화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들은 중앙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했다. 당시 동독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적 실험을 강요받았으며,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동독은 “계획경제의 완성”이라는 슬로건하에 경제운영조직에 있어서 변화를 모색한다. 소위 “계획경제의 완성”을 위해서 취해진 첫 조치는 기업조직과 통제조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동독 정부는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에 동독 기업들의 생산 과정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동독의 모든 기업들을 157개의 콤비나트로 나누어 귀속시켰

18) 동독은 서독과의 체제경쟁으로 인해 체코, 폴란드와 같은 과감한 개혁은 취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개혁성향을 보였다. K. C. Thalheim,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r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3. Aufl.(Berlin, 1988), p. 85.

다. 이 조치를 통해서 동독기업들은 기초 원자재 생산은 물론이고, 중간재 및 최종재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콤비나트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같은 계열의 콤비나트에 소속된 기업들은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국내 수요와 해외 수출까지도 함께 계획하는 단일생산체제로 바뀌었다.

콤비나트의 사장은 11개 부처의 해당 산업장관 밑에 직속되어 있었으며, 콤비나트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계획달성을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콤비나트의 사장은 한편으로는 해당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이전에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 회계와 계획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으며, 기업의 경영자로서 콤비나트에 소속된 기업들의 중요한 의사결정권도 위임받았다. 1982년부터는 수출기업들에게도 이러한 권한이 확대되었다.¹⁹⁾

이와 같은 기업운영과 지도체제의 변화를 위해 동독 정부는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많은 법률을 제정하였다.²⁰⁾ 새로운 법률들은 기업의 계획과 회계 그리고 경영 활동을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정책은 노동생산성의 향상, 제품의 질 향상, 그리고 효율성의 증대라는 목표 외에도 기술력 향상을 통해서 투입을 줄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²¹⁾ 또한 이 정책은 중앙의 의사결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 부분 중앙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19) Hannelore Hamel, "Sozialistische Unternehmenskonzentration und Managerverhalten : Die Kombinatsbildung in der DDR als Effizienzproblem", *Anreiz- und Kontrollmechanismen in Wirtschaftssystemen 1*, hrsg. v. G. Hedtkamp(Berlin, 1981), pp. 67~97.

20) 대부분의 법안들은 1981년 호네카에 의해 발표된 "80년대의 동독의 경제전략"의 틀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21) Karl C. Thalheim, "Ordnungspolitische Aspekte der heutigen Wirtschaftspolitik der DDR", *Deutschland Archiv*, Heft 5(1984), p. 513.

콤비나트의 자립을 위한 노력은 장관에서 콤비나트의 사장, 그리고 그 밑에 다시 각 기업들의 경영자에 이르는 명확한 명령체제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²²⁾

1980년대에 동독 정부가 주창했던 “사회주의 계획의 완성”은 중앙정부의 계획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²³⁾ 중앙정부의 계획 강화를 위해서 1980년대에는 국가계획 분야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특히 당시 중요했던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소비재의 생산 등이 증대되어야 했다.²⁴⁾ 따라서 중앙에서는 재화생산량의 계획을 70% 확대했고, 사회주의 국가로의 수출 역시 75% 이상 확대하였으며, 서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 계획 역시 80% 가량 확대하였다.

1980년대의 동독의 경제개혁 핵심은 여전히 국가계획 지표의 강화에 있었다. 당시 경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는 산업생산물, 순생산, 총 생산, 순이익, 그리고 노동생산성, 국민들의 소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화의 생산, 수출량 등이었다. 따라서 동독 정부는 이러한 계획들을 월별, 분기별로 세분화하고 그 계획을 콤비나트와 공장에 하달하였다.

1980년대에 동독은 계획의 확대를 통해서 콤비나트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반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1984년에는 순생산, 순이익, 수출실적 등과 같은 평가기준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평가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기업들은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에 힘 썼고, 그 결과 생산비 감면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정

22) Günter Mittag, “Theoretische Verallgemeinerungen der Erfahrungen der Entwicklung der Kombinate für die Leistungssteigerung in der Volkswirtschaft, insbesondere bei der Nutzung der qualitativen Faktoren des Wachstums”, *Wirtschaftswissenschaft*(DDR), Heft I(1984), p. 26.

23) Becher, Jürgen and Horst Richter, *Planmäßigkeit und Ware-Geld-Beziehungen in der entwickelt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Berlin : DDR, 1986), p. 100.

24) *Ibid.*, p. 108.

책에 의해 에너지와 원자재의 절약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얼마나 기술진보를 촉진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생산재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1982년에 새로운 경제계산방식이 도입되었다. 1982년의 신경제계산방식은 1960년대의 “신경제체제” 때의 개혁과는 달리 모든 기업의 가치와 국가계획 수행을 위한 과제를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비용, 가격, 수익 그리고 이자도 확정되어야 했다. 만약에 기업들이 원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곧장 물자조달의 조절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도록 하고, 명령·지휘계통을 통해서 원래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하도록 하였다.²⁵⁾ 많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핵심은 원부자재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서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1982년에 장려기금을 만들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동독은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외무역의 개혁은 단지 무역기구의 조정과 인센티브의 개혁에 제한되었다. 콤비나트의 재조정과정에서 1981년부터 대외무역청에 소속되어 있던 대외무역업체를 새롭게 조직하여 대부분 콤비나트에 귀속시키고 그들의 판매조직으로 편입시키거나 산업부(Industrieministerien)에 직접 귀속시켰다. 7개의 콤비나트는 자율적인 대외무역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단지 3개의 대외무역기업과 7개의 대외무역서비스업체는 대외무역성에 귀속되었다.

25) *Grundfragen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sführung in der Volkswirtschaft der DDR*, in Einheit (DDR, 1985), p. 343.

(표 3) 개량사회주의 사례

경제개혁	소련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동독
개혁시기	1960~1984	1968~	1952~1964	1963~1989
개혁명칭	코시긴 개혁	신경제 메커니즘	準분권형 노동자관리사회주의	신경제체제
가격개혁	농산물가격인상 농산물의 화폐 거래 허용	제한적 가격지유화 실시 자유가격, 최고가격, 고정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될 (소비재 75%, 생산재 30%)은 국가가 통제		가격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 1970년대 이후 생산성 향상 위해 가격조정
분권화	기업평가 : 총산출량 → 판매량으로 평가 목표할달량 축소(20~30개 → 8개로 감소) 이윤유보(임금인상과 투자) 기업책임제	생산목표 폐지 및 물자공급 중단 기업간 거래 허용 세부계획은 기업에 위임 이윤유보(임금인상 감가상각에 사용)	기업이 중앙기구로부터 분리 자주계획, 자율경영 투자의 분권화 → 사회주자금이 기업에 운영자금 대부	중앙계획 축소 → 기업의 세부적 계획 시달 중지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강조
임금정책	최저임금 인상	제한적(고임금에 대한 세금부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함	생산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분권화 환원	1970년 이후 분권화 조치 계획의 과학화 강조 생산연합체 확립(1970~1980) 제한적 분권화 지속			1971년에 과거의 중앙계획으로 회귀 → 기업은 생산활동량 배정 받음
국가의 간섭	중앙정부의 생산단위에 대한 통제강화	조세, 임금, 이자율, 환율, 화폐 및 재정정책을 통해서 간접통제	기업이 생산량 최저조업률을 정하고 미달성시 국가가 간섭	1979~1981년 사이에 모든 기업들은 151개의 콤플리트로 나누어 귀속됨 → 콤플리트의 시장은 11개 부처의 장관 밑에 직속
재산권의 변화	사유재산 일부 허용	사유재산 일부 허용	농업부문의 집단농장 포기 → 개인소유 위임 종업원 5인 이하 기업 → 개인소유	1976년 아래로 개인상점, 숙박업, 수공업 허용

3) 시장사회주의

(1) 시장사회주의 개혁 내용

개량사회주의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앙계획을 포기하고 시장을 조정기구로서 인정한 정책들이 나타난다. 이 개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시장사회주의” 혹은 “경쟁 사회주의”라고도 불린다. 시장사회주의의 경제개혁의 특징은 공유재산의 원칙은 과거와 같이 유지하되,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제한하고 시장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정책을 통해서 각 분야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사회주의가 이전의 개량사회주의와 구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국가가 시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량사회주의 때보다도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사회주의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었는데, 그 중 하나의 형태는 공유재산의 원칙은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시장과 계획의 혼합체제를 통해서 중앙집권적 그리고 분권적 의사결정의 장점을 모아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고,²⁶⁾ 다른 또 하나의 형태는 시장에 의한 조정을 완전히 수용하나, 공유재산의 원칙은 계속 유지하는 형태이다. 국유재산과 같은 사회주의 기본 체제는 두 형태 모두 같고, 소비재의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기구를 도입한 것이다.²⁷⁾

26) W. Brus, *Funktionsprobleme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Frankfurt/M, 1971), p. 100.

27) 헝가리의 개혁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은 코르나이의 논문 참조. J. Kornai,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 Visions, Hopes, and Re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1986), pp. 1687~1737. 이런 개혁안을 추종하는 경제학자들을 코르나이는 “연약한 개혁자”라고 칭한다. p. 1728.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도 공유재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공기업들이 계속해서 전체 GDP에서 큰 봉을 차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들은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에게 종속되어있었다. 시장이 기능을 하긴 하였으나 조정의 기능과 영향력이 상당히 약했고, 국영기업의 경영자들은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관찰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상사 관료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다. 현실적으로 정부 관료들이 회사의 운명, 세금, 보조금과 신용대부, 가격과 임금 등 모든 재정적인 조정 등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가의 입장에서 시장에서의 성과보다 오히려 관료의 눈치와 명령에 오히려 더 종속되어 있었다.

시장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유통체제를 부분적으로 개혁하여 생산요소 시장 등이 등장하며 비록 초보적 수준이긴 하지만 시장이 공식적으로 형성되는 단계이다. 개량사회주의와 비교했을 때 시장사회주의에서는 경제적 분권화가 더욱 심화되고, 임금, 가격결정권, 이윤 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

〈표 4〉 시장사회주의의 개혁 내용과 문제점

	시장사회주의
개혁내용	중앙정부의 직접개입을 제한 → 계획과 시장 혼합 시장을 도입하여 정부가 경제정책을 통해서 각 분야 조정 유통체제 개혁으로 생산요소 시장 등장 → 초보적 수준의 시장형성 경제적 분권화 심화(적극적 분권화) 기업의 경영자율권 부여(임금, 가격결정권 부여, 이윤 자율적 처리 가능) 수익성에 의한 독립체산제 강조 개인기업이나 상행위를 허용하여 일시장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시장 인정
문제점	관리들이 이자율, 세금 보조금 등을 통해서 경영에 개입 시장 신호와 경쟁의 제약으로 비효율 초래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 비효율 제거 못함

(2) 국가별 경제개혁 사례

1970년대는 동유럽 국가의 상당수가 개혁의 폭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시장사회주의를 시도하였다. 시장사회주의의 사례를 소련, 평가리,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폴란드 순으로 알아본다.

① 소련

먼저 소련의 경우는 고르바초프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시도했던 경제개혁(페레스트로이카)을 시장사회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²⁸⁾ 페레스트로이카의 초기 단계인 1985년부터 1987년까지는 주로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 초기에는 여러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고, 1987년 초부터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1987년에는 과감한 경제개혁안을 구사하여 12차 5개년 계획이 실행되었고,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 콤플렉스를 창설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기계공업과 설비기계 분야에 두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가 주로 이루어졌다.

경제관리체제와 경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지도체제를 효율성 있게 조직할 필요성도 대두되었으며, 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과 책임화 대, 기업의 경제적 인센티브 보장 등이 중요한 개혁내용이었다. 기업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코시

28)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의 개혁만을 고려한다면 과거 리베르만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고르바초프는 기업경영과 소유법에 있어서 과거와는 상당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특히 19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미미하나마 원자재 시장을 인정하는 것이 과거 리베르만 개혁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해서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을 시장사회주의의 초기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긴 개혁 당시보다 더 과감하게 기업으로 이양하였다. 권한과 책임 분배를 통해서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고, 이것으로 자기금융(self-financing), 자기보전(self-recoulement), 자주관리(self-management)를 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는 경제계산이 강조되었고, 독립채산제가 더욱 강조되었다.

1988년 1월의 「국가기업법」에서는 자기회수, 자기금융, 자주관리의 3 원칙에 기초하여 기업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였다. 이 법에서는 기업의 법률적·경제적·재정적 자립성을 부여하였고, 기업의 계획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주적 계획과 국가의 주문 및 합의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자재와 원자재의 공급도 국가가 할당했던 것을 계약과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전환하였으며, 기업의 중대 사안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명령적이고 행정적 관리체제에서 기업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형태로의 기업운영의 전환은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기업들이 가격과 임금인상을 주장하게 되어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부작용 발생하게 되었다. 1989년 10월에는 소유법, 토지세법, 사회주의 기업법, 단일세법, 임대차법 등을 채택함으로서 소유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경제개혁의 폭을 더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²⁹⁾

② 헝가리

헝가리의 시장사회주의는 1980년 3월 헝가리사회주의노동자당이 제12차 대회를 계기로 경제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개혁내용을 보면 이윤동기, 시장원리, 경영의 창의력 등의 요소들을 상당 수준 허용하는 개혁정책을 채택하였다. 헝가리의 1980년대의

29) 정여천, “구소련의 경제체제”,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비교경제체제론』(서울 : 박영사, 1997), 622~628쪽.

개혁은 과거 1968년의 개혁보다 더 폭넓게 확대되고, 계획경제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적 요소를 대거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의 개혁은 국민경제의 관리 측면과 기업의 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행정기구의 개편을 통해서 관료의 기업에 대한 간섭을 줄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헝가리는 가격개혁을 1985년 이후에야 비로소 추진하였는데, 이는 유고슬라비아가 1960년대부터 가격개혁을 추진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늦게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85년에 시작된 헝가리의 가격개혁은 행정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유가격이 아니었다.³⁰⁾ 자유시장가격으로의 개혁은 1990년에 들어와서 실시되었다.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지 못하고 국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행정가격은 재화의 희소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원배분의 왜곡과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자유화 조치는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헝가리의 경우 엄청난 양의 자본이 해외로부터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경제적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1980년대 말까지 특이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³¹⁾

③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의 시장사회주의는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장제도를 이용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 그 이전의 개혁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부의 행정적 간섭을 줄이고, 경제운영의 분권화와 기업의 자주성을 더 폭넓게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30)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System of Communism*(1992), p. 514.

31) 참고로 헝가리는 사회주의 국가 중 외채가 가장 많다.

당시의 주요 개혁 내용은 기업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업의 소득 취득분을 51%에서 71%로 증가하여 투자를 분권화한 것이다. 또한 은행제도를 개혁하여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은행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은행의 독자적인 경영은 실상 어려웠고, 은행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회와 지배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정부의 통제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헝가리 정부는 1965년에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는 가격개혁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디나르(Dinar)를 실세 환율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1달러=720디나르에서 1,250디나르로 평가절하하였다. 또한 대외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관세를 평균 23%에서 11%로 인하하였다.³²⁾ 유고슬라비아는 이후 1970 ~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기업의 자주적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앞에서 언급된 형태의 개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유고슬라비아의 시장사회주의는 노동자의 자주관리체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가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소비자 주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1965년에 국유재산을 사회적 소유형태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에게 위임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가격이 산업의 각 분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과감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시장과 가격 체계를 근간으로 한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상당히 진전된 개혁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해체할 수 없었던 사회적 공유재산은 여러 측면에서 시장의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건전한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32) 김광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의 경제시스템”, 22쪽.

을 생성시킬 수 없었다. 노동자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 노동자 일인당 임금을 극대화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였다. 개혁과 함께 추진된 공장 민주화는 공장의 효율성이나 시장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의사결정 등이 정치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역시 상당히 미비하였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도 결여되어 비효율을 초래하는 결과를 냥았다.

④ 폴란드

폴란드는 1980년부터 1989년 사이에 시장사회주의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폴란드는 정부의 보조금 축소,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허용, 공기업 분할, 개인회사 등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형가리와 폴란드는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계획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기업의 자주성을 부여하여 과거의 중앙계획을 부분적이나마 시장형태의 통제로 대체하였다.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실시된 바 있는 3S정책, 즉 기업자립(self dependence), 자기금융(self finance), 자주관리(self management)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기구의 도입을 통해서 가격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산업에 대해서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했다.

폴란드 1980년대 초반의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균형이 극심했고, 이로 인해서 경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1987년에 와서 국영기업들을 당의 관료가 아닌 전문가가 맡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하였고, 정부가 가격개혁을 취함으로써 공업과 소비재 분야의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였다. 소비재의 가격을 생산비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가격개혁은 폴란드 국민의 상당한 불만을 사기는 했으나, 그동안 왜곡되었던 가격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

폴란드의 경제개혁의 주요 목표는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자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경우도 기업들이 시장에 의해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이자율, 세율 등에 의해 정

〈표 5〉 시장사회주의

경제개혁	소련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개혁시기	1985~1991	1980~1989	1965~1990	1980~1989
개혁의 특징	페레스트로이카	이윤, 시장원리 도입	노동자 자주관리제도 심화	-
가격개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격체계 개편 →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	보조금 축소 → 가격개혁(1985) = 행정가격유지 → 1990년에 본격적인 가격자유화	시장도입, 보조금 폐지 디나르(Dinar) 실세환율로 평가절하 1\$=720Dinar → 1%=1250Dinar	보조금 축소
기업경영의 분권화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확대 자기금융, 자기보전, 자주관리 독립채산제 강화 협동기업과 개인기업의 활동 확대	수익성에 의한 독립채산제 개인이나 기업의 상행위 허용	경영의 분권화 → 기업의 자주성 확대 운행제도의 개혁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허용, 시장에 경쟁도입, 기업의 자주성 부여 가격, 이자율, 세율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 받음
임금정책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제한적(고임금에 대한 세금부과)	노동자의 자율에 맡김	-
재산권의 변화	소유형태의 다양화(소유법, 토지세법, 사회주의 기업법, 단일세법, 임대차법)	사유재산 일부 허용 조인트벤처 장려	사회적 소유, 협동농장	공기업 분할, 개인회사 설립 허용,

부의 통제를 받았으며, 실제로 가격과 이자율, 세율 등은 지속적인 협상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³³⁾ 이러한 제도적 상황하에서 변형된 시장의 신호와 경쟁의 제약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체제전환

(1)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경제개혁의 내용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은 사회주의적 본질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었으나, 체제전환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제도로 대체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³⁴⁾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의 경제정책의 중심과제는 자유화(liberalization), 거시 경제적 안정(macroeconomic stabi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 법제도적 개혁(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등이다.³⁵⁾

자유화는 그동안 세계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받음으로써 왜곡되었던 가격체제를 시장가격체제로 재설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가격체제는 대부분 정부가 설정하는 계획가격으로 이 가격에는

33) D. Lipton, J. Sachs, "Creating a Market Economy in Eastern Europe :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1/1990), p. 80.

34) 체제전환 국가들 : 중·동부 유럽 : Albania, Bulgaria, Croatia, Czech Republic, FYR Macedonia, Hungary, Poland, Romania, Slovak Republic, Slovenia ; 발칸 : Estonia, Latvia, Lithuania ; 독립국가연합 : Armenia, Azerbaijan, Belarus, Georgia, Kazakhstan, Kyrgyz Republic, Moldova, Russia, Tajikistan, Turkmenistan, Ukraine, Uzbekistan ; 아시아 : Cambodia, China, Laos, Vietnam. 체제전환국의 10여 년 동안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IMF, *Transition economies :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November, 2000), p. 1 참조.

35) 체제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경제정책의 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형곤, 『체제전환의 경제학』(청암미디어, 2001) 참조.

생산비가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못하다. 따라서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을 경우 생산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다. 가격자유화란 기본의 가격체제를 시장가격체제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가격이 생산비용을 반영하는 시장가격으로 형성될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중단된다. 자유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독점산업을 해체하기 위해서 시장진입의 자유, 가격형성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자유화조치로는 무역 장애요인 제거 및 관세인하,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시장진입장벽 철폐 등을 들 수 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자유화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바, 시장이자율에 의한 금융시장의 운용, 우대금리의 철폐, 단일환율체제로의 이행,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은 가격자유화 조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장악하고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낮게 책정되어 있던 가격이 갑자기 생산비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인상될 때 제품의 공급량 부족과 소비자의 수요 폭발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 자유화로 인한 물가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정 및 금융 정책적 수단을 이용한다. IMF는 재정적자가 물가상승을 야기하지 않도록 GDP 대비 2% 이하를 유지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성장 잠재력 및 경제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권유한다. 특히 보조금 축소와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조세수입의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사유화는 소유권을 국가에서 민간 분야로 이전하는 과정을 말하나, 체제전환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유화는 재산권 제도를 시장경제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으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사유화 추진, 국영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속한 사유화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표 6〉 체제전환 초기 개혁의 특징

특징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개혁시기	1991. 1. 1.	1991. 1. 1.	1990.	1990. 1. 1.	1991. 11. 1
개혁유형	급진	급진	급진	급진	급진
가격지유화	70%까지 즉시 자유화 (1990~1991)	85%까지 즉시 자유화하고 1991년 말까지 95% 자유화 (1990. 9)	19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화하여 1991년 말까지 92% 자유화	즉시 90% 자유화(1989. 8)	4단계로 나누어 실시(1990년부터 1년 내에 80% 자유화)
화폐 및 재정 정책	적절히 제한적	제한적	적절히 제한적	제한적	적절히
임금정책	진보적 (최저임금보장)	제한적(고임금에 대한 세금부과)	적절히 제한적 (고임금에 대한 세금부과)	제한적(고임금에 대해서 소급하여 별도 세금 부과)	제한 없음
환율정책	초기에 강한 평가절하(floating rate)	평가절하	점진적 평가절하 crawling peg	초기에 강한 평가절하	평가절하
국내 기업들의 태환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가계에 대한 태환 허용	제한적 허용	제한적 허용	허용	불허	불허
자본이동을 위한 태환	불허	불허	불허	불허	불허
대외무역자유화	제한적 자유화	대폭자유화	점진적 자유화	대폭자유화	제한적 자유화
사유화	소규모 : 제한적 대규모 : 없음	초기 소규모 사유화에서 나중에 대규모 사유화 시행	소규모 : 점진적 대규모 : 제한적으 로 사유화	소규모 : 대폭 대규모 : 점진적 으로	소규모 : 제한적 대규모 : 제한적

출처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91~1992* (New York, 1992), p. 40, and IMF, *World Economic Outlook*(Washington D.C., 1992), p. 22.

법·제도적 개혁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으로 법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경쟁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쟁 제한적

규제의 완화, 경제체제의 자유화 추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제전환의 사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1980년대 말부터 광범위하게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고, 이른 시간 내에 시장을 개방하였다. 국가마다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추진하였던 개량사회주의나 시장사회주의와 같이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국가체제의 전 분야를 빠른 시간 내에 시장경제로 대체하는 혁명적 개혁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체코공화국, 폴란드, 헝가리는 IMF, OECD, World Bank와 삭스(J. Sachs)를 중심으로 한 신고전학파 학자들의 권고안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들 국가가 채택한 전략은 소위 충격요법(shock therapy)으로 불려지는 급진적 경제개혁으로 말 그대로 외부의 강력한 충격(시장의 도입)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경제행위에 젖어 있는 경제 주체의 활동을 시장지향적으로 바꾸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은 체제 내적 제도보다 시장의 이기적 행동이 우선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을 전제로 추진된 것이다.

체코공화국, 폴란드,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에 우선적으로 가격기능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가격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가격자유화를 통해서 그 동안 국가의 계획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을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시켰다. 가격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상 품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폴란드의 경우 1990년 1월에 식료품과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제품의 가격자유화를 먼저 실시하였고 전기, 가스, 일부 의약품 등은 가격자유화에서 제외하였다. 체코공

화국의 경우에도 주요 생필품의 가격상한가를 설정하여 유통마진을 통제해 오다가 1991년 1월부터 그 동안 보장해 왔던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였다. 헝가리의 경우는 1986년부터 부문별로 여러 단계에 걸쳐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 1991년 1월에 전 분야에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였다.³⁶⁾

이들 국가에서는 가격자유화의 결과 그 동안 정부의 보조금 의해 낮게 책정된 재화의 가격들이 생산원가를 반영한 현실가격으로 형성되었고, 그 동안 팽배해 있던 잉여화폐를 제거할 수 있었으며, 외국과의 무역자유화 등을 통해서 이른 시간 내에 전면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유화 정책과 함께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개혁 초기에 상당한 경제적 충격도 컸다. 현재는 이들 국가들이 통화공급을 엄격히 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제수지를 방어하여 인플레이션의 조정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경제가 시장의 원리를 따라 생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격자유화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가격자유화를 통해서 올바른 가격체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국내가격은 또한 국제가격 수준에 수렴되어 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야만 한다. 대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가격자유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한 것과는 달리 무역자유화는 국내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실시하였다. 폴란드와 체코공화국의 경우는 가격자유화와 동시에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 국내 시장을 외국인에게 과감히 개방하여 자유화를 위한

36) 조명철·한정숙,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정책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여름호(1999), 143쪽.

자본과 기술, 시장경제에 대한 경영 마인드와 노하우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투자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진입장벽을 과감히 철폐하여 투자활성화 조치를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유화된 재산권을 가지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 제한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과거 정부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였으며,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³⁷⁾ 또한 대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기업이 보유하거나 수입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폐의 태환도 허용하였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개혁이 진행된 곳이 대외무역분야이다. 대외무역이 더 이상 국가나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중앙 무역기구에 의해 독점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수출입에 대한 쿼터 제한 등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관세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체코공화국이 관세를 5.7%로 낮추어 가장 진보적으로 개혁을 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평균 10 ~ 15%의 수입관세를 적용하였다.

상품에 대한 가격도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에서 자유화되었고, 에너지 공급원이나 임대료를 제외한 다른 재화의 가격에 대한 통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자율도 은행에 의해 자유화되었다. 임금에 있어서는 오직 형가리만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었던 반면, 다른 국가들은 지나친 임금상승을 막기 위해서 벌칙세를 부과하였다. 임금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방지를 위해서 국가는 국영기업을 통제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업들의 개혁에는 아직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사유화는 기간이 대단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파산법이나

37) 박용주, “북한 경제 체제전환 예상모형과 주요 과제”, 『북한조사연구』, 제3권 제1호 (1999), 91쪽.

세금규정 등의 마비로 인해 기업의 개혁도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된다. 특히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경우 사유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사유화는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소규모 사유화는 시작이 되었지만 어떤 특별한 원칙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도 이 두 나라는 은행의 자본화가 이루어지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도 결여되어 있다.

금융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도 체코공화국과 헝가리, 폴란드는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체제전환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유치와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환율제도를 개혁하였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신속한 가격자유화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외환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해 오다가, 나중에는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크롤링 펫 시스템(crawling peg system)³⁸⁾을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통화가치의 절하를 시도하여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자유화 역시 초기부터 과감하게 추진하여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국의 기업들은 각각 1989, 1990, 1991년 이후에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에 필요한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외환을 공정환율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이들 국가들은 1995년 6월, 9월, 및 1996년 1월에 각각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을 공표함으로써 경상거래와 관련한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외환시장에서 상업은행이 주도적 위치를 점하여 대외지급능력 확보와 효율적인 외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⁹⁾

38) crawling peg system이란 “균형환율 수준을 반영하는 고정환율제를 보완하여 환율을 소폭, 정기적으로 변동시켜 균형환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수지 조정과정에 있어서 외화시세의 단기적 안정성과 장기적 신축성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폴란드와 헝가리는 각각 1991년 5월 및 1995년 3월에 이 제도를 시행하였음. 김용복, “주요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99-17, 1999), 23쪽.

은행체제 역시 기존의 일원적 금융제도(mono bank system)를 이원적 금융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 바꾸어 상업은행들이 종전의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동유럽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이원적 금융제도를 도입한 것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폴란드와 브리타니아가 1987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1989년에 그리고 구 체코슬로바키아가 1990년에 도입하였다.⁴⁰⁾

체코공화국, 폴란드는 개혁 초기부터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 생산에 있어서 재화의 희소성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신속한 사유화를 추진하여 경제 주체들이 개인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세제 개혁도 추진하여 시장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분야별 구성요소 상호간의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재정적자가 물가상승을 야기하지 않도록 GDP 대비 2% 이하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폴란드, 체코공화국, 폴란드 같은 국가들의 급진적인 경제 개혁 노력은 개방과 자유화의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정부의 개혁 노력은 국제 실물 및 금융 시장에서의 해당국 신인도 상승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은 시장으로의 과감한 정책과 지속적인 개혁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의 원활한 외자 유치를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급진적 경제개혁은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혁을 초

39) 위의 글, 23쪽.

40) 정태연 외,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추진상황』(한국은행, 1995); 위의 글, 17쪽에서 재인용.

래하였고, 이와 동시에 수반된 상당한 정치, 경제, 사회적 충격과 부작용으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의 개혁정책의 실수를 지적하자면 이들 국가들이 수요 측면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급 측면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것은 충격요법을 제안한 OECD, World bank, IMF와 같은 국제기구와 삭스(J. Sachs)와 같은 학자들이 제도학파 학자들이 중시하는 체제의 비공식적 제도와 같은 내부적 요인, 경제제도, 기술개발, 기타 구조적 문제점 등의 공급능력을 결정하는 제반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비교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 및 평가

앞의 제2절에서는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생성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까지의 과정을 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론 및 현실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를 근거로 북한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북한은 지난 7월 1일에 가격과 임금을 대폭 인상,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 강화, 분배방식을 개선, 원부자재 시장 개설, 환율현실화 조치를 취했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 주요내용을 평가한다.⁴¹⁾

(1) 가격 현실화

7·1조치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생필품 가격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되었다. 소위 정부의 행정가격은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낮게 책정되었고, 부족분은 국가의 재정지출에 의해 보충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모든 가격을 원래의 가치대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즉, 정부의 보조금을 폐지하고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가격체제로 바꾼 것이다. 과거에는 가격체정에 있어서 석탄과 전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였으나, 이제는 쌀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가격을 재조정하였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정부가 쌀 1kg을 80전에 수매하여 10분의 1가격인 8전에 배급하였고, 그 결과 실제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의 가격차가 약 610배 정도나 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 이후에는 정부가 40원에 수매하여 4원의 유통비용을 포함하여 44원에 배급함으로써 실제 농민시장의 가격과 비슷하게 국정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러한 가격현실화는 종전의 사회주의적 가격체제를 대폭 수정한 것으로 전체 경제운영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과거에 김일성이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쌀 배급을 농민시장가격으로 인상시킨 것은 큰 맥락에서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난은 단지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앞의 동유럽의 경제체제의 변화에서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부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다.⁴¹⁾

41) 이하 내용에서 인용(“……”) 부분은 북한의 내부 문건으로 최근 『월간조선』이 2003년 1월호의 별책부록에 실은 바 있다.

화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북한 역시 1990년대 이후 생산이 붕괴되면서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비생산적인 지출이 생산적 지출보다 많았으며 특히 “그 가운데서 공짜로 나가는 뜻이 무려 74%나 되었다”.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에만도 한 해의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이 국가 부담으로 지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의 재정적자는 심각해서 북한 당국이 스스로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2년분 예산액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⁴²⁾ 따라서 이번 가격 현실화 조치를 통해서 정부의 가격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 그 동안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과의 심각한 가격격차로 인해 생산물이 농민시장 등 비공식부문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생산현장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이탈한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곡물가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의 가격수준으로 인상시킴으로써 농민시장의 물자를 정부가 흡수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⁴³⁾ 정부가 농민시장의 가격으로 수매할 경우 농민의 입장에서는 굳이 농민시장에서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북

42) 중국도 가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이 심각해지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개혁을 실시하였다. 1979년에서 1986년 사이에 농산물가격을 30%, 공산품은 10%에서 25% 정도를 인상시켰다. 가격개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자 중국은 1,130개 도시에 8,658개의 가격통제소를 설치한 바 있다.

43) 농민시장의 확대는 북한 당국이 1990년대에 들어와 중앙에서 하던 배급을 각 도·군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북한 당국이 1996년 1월에 분조관리체를 개혁하고, 1999년부터 평양에서도 각 기관과 단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식량을 배급하라고 지시하면서 농민시장은 더욱 더 확대되어갔다. 기업소들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 생산량의 일정 부분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생산물을 식량과 교환하여 식량난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이 때부터 실상 국가로의 물자유입은 줄게 되었고,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으로의 물자유입이 증가하여 농민시장이 활성화되었다.

한 당국의 입장인 것 같다. 아래 문구에서도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의도가 나타난다.

“이번에는 국가에서는 알곡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농민들을 우대하는 원칙에서 국가가 수매받는 알곡 값을 흰쌀 1kg에 82원으로부터 40원으로, 강냉이 1kg에 49원으로부터 20원으로 대폭 올려놓았다. 콩도 흰쌀과 같이 1kg에 40원으로, 돼지고기는 생체(뼈 있는 고기) 1kg에 110원으로 값을 크게 올려 농민들이 높은 생산의욕을 가지고 알곡과 축산물 생산에 떨쳐나서게 했다.”

이번 가격인상조치에서 북한 당국이 돼지고기 지육(뼈 없는 고기)의 수매 값을 1kg에 170원, 닭고기는 1kg에 180원으로 축산물의 가격을 농민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농민시장에서 이를 장사꾼을 없애겠다는 의도도 있다. 즉 국가가 모든 상품을 흡수하여 국영상점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조치로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농민시장에서의 쌀값은 국정가격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일부 상품에 대해서 농민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 당국이 충분한 재정이 있어서 생산물을 농민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서 과거와 같이 더 낮은 가격으로 국영상점에서 공급한다면 농민시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그러한 재정능력도 없을뿐더러, 생산능력 또한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의도했던 것과 같이 농민시장과 장마당에서 장사꾼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높은 가격에 수매해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이번 가격 현실화 조치에 반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가격 현실화에서 특히 주요 공산품의 원료와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다른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석탄은 1톤에 1500원으로 44배, 전력 1000kw당 2100원으로 60배, 코크

스탄, 전기, 강판, 생고무의 가격은 45배, 휘발유와 디젤유의 값은 70배 이상 인상시켰다.⁴⁴⁾

(2) 임금인상

가격 현실화 조치와 함께 임금의 경우도 새 가격에 맞춰 재조정되었다. 종전에는 110원이었던 근로자의 임금이 2,000원으로 18배 인상되었다. 임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정에서 평균 2명 정도 일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자, 사무원 한 사람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2,000원 정도로 기준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 고급 기능공, 과학자들의 생활비를 더 높게 책정했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기사와 연구원, 대학교수의 생활비는 19 배 정도로 올렸다. 그밖에 비생산부문에 일하는 일꾼들의 임금은 17배 정도로 인상했다. 농민들의 생활비는 월 평균 2,300원 정도로 노동자나 사무원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이것으로 식량을 구매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금제도에 있어서도 실리보장적 측면에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밟힘으로써 사회주의적 평균주의를 지양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임금인상 조치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정부가 재정보조로 낮은 가격으로 보장하였던 것을 임금인상을 통해서 정부의 가격보조금을 없애고 개인이 번 돈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와 지출을 하게 함으로써 공유재산으로 인한 자원낭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도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실리를 생각해 가면서 생활을 해야만 한다. 특히 노동자의

44) 『월간조선』 1월호(2003) 별책부록, “한반도의 대전환” 참조.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이 없이는 식량과 생필품을 사기 어려워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바뀌어졌다.

가격인상과 임금인상의 폭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가격 현실화 이전에는 노동자 월급이 평균 110원이었고, 쌀 1kg은 8전이었다. 이론적으로 노동자들은 110원의 소득을 가지고 138kg의 쌀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7·1조치 이후에는 노동자들은 2,000원의 월 소득을 가지고 쌀을 45kg밖에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1조치 이전의 임금체제는 거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소득효과가 높게 하기 위해서 생필품의 가격들을 낮게 책정을 한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국영상점에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배급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돈이 있어도 국영상점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살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화폐의 기능이 교환이나 가치척도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단순히 배급표가 있을 때 배급표와 함께 교환수단으로의 기능만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7·1조치 이후 식량을 제외한 다른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배급표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화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즉, 화폐가 가치척도의 기능, 교환의 기능, 부의 축적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배급권의 폐지로 인한 화폐의 기능상의 변화는 재화의 교환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시장 확대에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 강화

공장과 기업소의 운영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기업소들의 평가에 있어서 생산량에 의해 평가되었으나, 이제는

벌어들인 수입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또한 기업이 수익을 남기게 되면 이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계획의 수립 권한을 하부로 위임함으로써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사업만 계획하고, 세부 사항은 기업소나 공장 차원에서 구체화시키며, 원료나 자재의 조달 그리고 가격설정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 당국은 7·1조치와 더불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까지 강조하며 철저한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격 현실화 조치 이전에는 생필품의 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분은 국가가 재정보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가격 현실화 조치를 통해서 상품의 가격이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가격으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이 공장이나 기업소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번 개혁조치는 과거의 독립채산제를 더욱더 강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restriction)을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restriction)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기업개혁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4) 분배방식의 개선

7·1 경제개선조치로 인해 기존의 분배방식과 사회보장체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과거의 평균주의적 분배에서 탈피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배분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 7·1조치 이전까지의 가격은 북한 당국의 계획가격으로 생필품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 쌀값의 경우 1946년 이후 변화 없이 실시되었다. 7·1조치 이전에는 쌀 1kg에 8전에 배급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와 사무원의 실질생계비에서

약 3.5%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이 때는 하루만 일하면 한 달 식량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애써 가며 일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일하지 않고, 1990년대에 들어서 국가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직장마저 버리고 장사에 나섰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1조치에서는 근로자의 실질생계비에서 식량 값이 차지하는 놈이 50% 정도 되게 조정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든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체제로 바꾼 것이다. 특히 공장이나 기업소들이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남는 수익은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에는 거의 무상으로 공급되었던 주택과 같은 것들이 제값을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⁴⁵⁾ 수도·전기세도 쓴 만큼 비용을 부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어 사회주의적 자원낭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5) 원부자재 시장 개설

원부자재 거래는 시장이 아닌 공장, 기업소 간에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했으나, 7·1조치 이후에는 원부자재 시장을 개설했고, 교역물자의 종류와 범위는 국가가 지정했다.

(6) 환율 현실화

또한 환율도 1달러에 2.16원이던 것을 1달러에 150원으로 현실화시켰다. 특히 외화 환전표를 폐지하여 외국환을 원화로 또는 원화를 외국환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45) 주택사용료는 한세대가 60m²인 경우 한 달에 78원이고 난방료는 한 달에 175원이다.

2)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 비교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정부, 개인, 기업 등의 전체에서 효율성과 실리를 강조한 것으로 기존의 계획경제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 즉 공유재산으로 인한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적 이용의 문제, 인센티브의 문제 그리고 연성예산체약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들 중에서 가격 현실화, 임금체제의 수정, 가격설정 방법의 변화, 원부자재 시장, 환율의 현실화 등은 시장 기능을 강화한 조치라 볼 수 있다. 또한 계획수립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공장이나 기업소의 경영에 있어서 분권화 조치는 비계획부문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본 조치는 계획경제의 정상화라기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생산성과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의 개혁조치의 내용을 앞에서 언급한 4단계에 걸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변화 과정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북한의 현재의 개혁은 개량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로 가기 전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량사회주의건 시장사회주의건 가격 개혁에 있어서는 모두 보조금을 축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초기에는 농산물 가격에만 가격인상을 했던 것을 나중에는 전체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1950년대 초반부터 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장가격과 계획가격의 범위를 축소해 나갔다.

북한의 이번 가격개혁 조치는 대단히 큰 인상폭이라고 볼 수 있다. 쌀 가격의 경우 8전에서 44원으로 550배 인상되었고, 전력은 60배 정도 인상되었다. 가격인상폭만으로도 과거 암시장과 국정가격과의 가격 왜

곡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7·1조치 이후의 새로운 임금체제에서는 식생활의 비중이 전체 임금의 50%를 차지하게 설정되어 한 가정에 두 사람이 노동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도 생활하는 데 빠듯하게 되어 있다. 과거와 같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낮은 가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각종 혜택도 사라지게 되어, 노동자들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큰 변화를 지켜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이제는 개인이 번 수입으로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여야만 하는 체제로 변화된 것이다. 과거와 같이 사회주의적 관습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북한의 이번 가격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량과 생필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은 단기간 동안은 그 동안 비축해 놓았던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낙후한 생산시설로 인해 공급을 늘리기에 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을 현실화한 것은 또 다른 물가압력을 부채질하게 되고, 원래 의도했던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으로의 흡수도 어렵게 될 수 있다. 특히 임금인상으로 그동안 사용되지 않던 잉여화폐가 유통부문으로 흘러들어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심할 경우 정치체제의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자유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북한 당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북한은 가격자유화를 통해서 가격의 왜곡을 시정하고, 동시에 태환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정부문 시장 개방을 통해서 국제시장가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물가안정과 가격 현실화 조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에 가격 자유화조치로 인해서 동유럽 국가

들이 1990년대에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경험하긴 했지만, 생산자는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되게 된다. 앞서서 언급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개혁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격 개혁만으로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쟁을 허용하고, 경쟁을 방해하는 환경과 요소들이 같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격자유화만을 시행할 경우 그동안 잘못 형성되었던 가격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가격상승만 초래할 위험이 있다.

기업경영의 분권화 조치 역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항상 동반되었던 조치였다. 분권화 초기에는 기업의 평가방법을 총생산량에서 판매량으로 바꾸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가격과 임금을 결정하고, 생산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북한은 현재 계획화 사업이란 명분으로 계획지표를 새롭게 분담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⁴⁶⁾ 분권화의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의 생산경영활동을 다 중앙에서 계획화한다는 관점에서 많은 세부지표들을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계획화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대외경제조건이 불리해진 현 상황에서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하부조직의 책임성과 창의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지표들은 중앙에서 계획화하고, 그밖의 소소한 지표들은 해당기관과 기업소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분권화를 통해서 공장이나 기업소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독립채산제의 시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기업들에게 보장하는 분권화 조치가 얼마나 실효

46) “새 세기 경제관리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 『조국』, 통권 76호(2002), 24쪽.

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계획의 분담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기업단위의 창발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분권화는 실상 외형적 분권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과거 동독이나 폴란드의 경험처럼 공장이나 기업소의 책임경영자는 현재의 정치구조상 관료조직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도 정부관료들이 세금, 보조금과 신용대부, 가격과 임금 등에도 간섭을 하기 때문에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료의 눈치와 명령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분권화하고 경제계획부문을 줄인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분권화 조치가 어떤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소유권의 확대 및 개혁을 통해서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주어질 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분권화의 효과는 시장이 형성되고, 생산자가 시장의 가격에 반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한 것도 기업의 자율권을 대폭 인정했지만, 원자재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였다.

동유럽의 경제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북한 역시 현재의 경제개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 중 북한은 현재 개량사회주의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으나, 과거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개량사회주의나, 시장사회주의에서도 사회주의적 경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동유럽과 중국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절실히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북한은 과거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에 대한 순서(sequencing)를 결정할 수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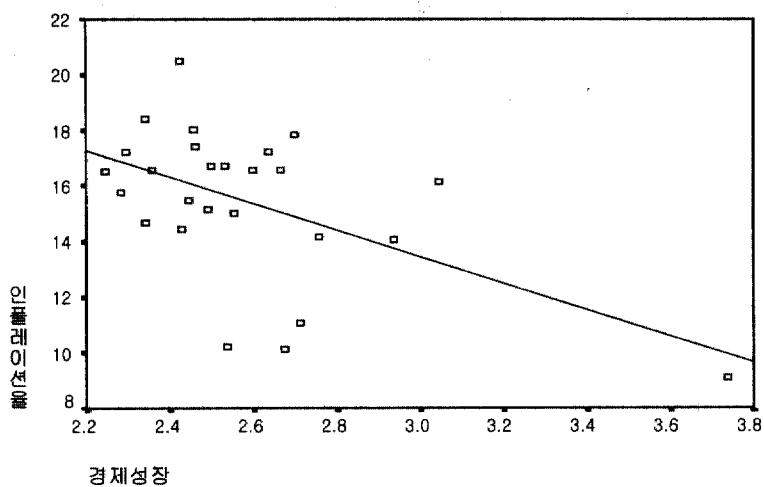
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위한 정치적 안정과 국가의 통제력 측면에서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 같이 정치적 민주화 없이도 국가의 통제하에 점진적인 경제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동유럽 국가들과 같이 시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계획가격에 의해 가격구조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국정가격과 암시장에서의 가격차가 7·1조치 이후에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개혁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이 따를 것이다. 가격 메커니즘의 기능이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인플레이션은 사전에 차단되어야 한다.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이른 시간 내에 억제한 국가들은 생산력을 이른 시간 내에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림 2>는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생산의 증가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다이아몬드 표시는 각각의 나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의 국가들은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서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생산력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왼쪽 윗부분에 위치한 국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생산의 감소를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처럼 인플레이션을 통제한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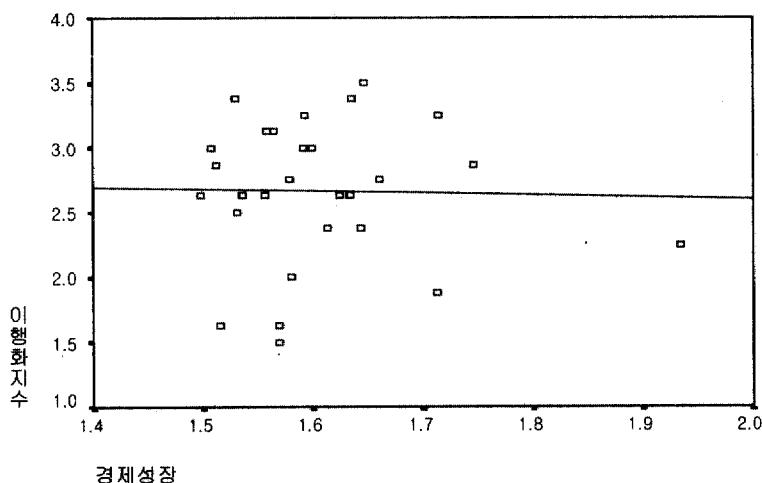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에서의 가격 차이와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잉여화폐와 소비재의 공급부족으로 북한이 가격자유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나 평양과 같이 점진적으로 가격자유화를 추진하여 잉여화폐의 제거 후 본격적인 가격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이것만

〈그림 2〉 체제전환국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그림 3〉 경제체제의 개혁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경제에 있어서 구조개혁은 사적 부문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그림 3>에서 이런 상황을 잘 볼 수 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의 구조개혁이 진전된 국가에서는 체제 전환 이전보다 생산력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서 오른쪽 위에 위치한 국가들은 경제의 구조개혁을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서 더 확고히 추진된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들에서는 생산의 증가가 관측되었다. 반면 왼쪽 아래쪽으로 위치한 국가들은 구조 개혁도 미진하며, 그에 따라 생산의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산업구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현재 과거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발전 단계가 훨씬 뒤떨어져 있다. 구 소련이나 동유럽의 경우 계획경제 시기에 이미 공업화 단계를 거치면서 북한보다 훨씬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국 영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90%에 이르고 있었으며 농업인구는 상대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동유럽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농업부문을 근거로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⁴⁷⁾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현재 공업부문의 생산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고,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한 자본재의 감가상각이 발생할 가능성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생산요소시장이나 자본시장 등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조건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반 개혁 작업은 경제적 혼란을 크게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현재 농업부문이나 1차 상품에 있어서의 생산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동유럽과 같이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⁴⁸⁾ 이는 북한이 개

47) J. Johnson, "Should Russia Adopt the Chinese Model of Economic Reform?",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27. Jg. Cologne(1994), Nr. 1, p. 69.

48) 북한은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1990년대에 들어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붕괴로 상당 부분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현재는 중국의 경제개혁 당시인 1978년의 산업구조와 유사하다(중국: 농업 37.4%, 공업 37.1%, 기타 25.5%; 북한: 농림수산업 31.4%,

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농업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경제적 동기부여를 촉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분야에서의 개혁을 시도한다면 농업부문에서의 경제성장이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산성의 감소 등의 문제를 상쇄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외 무역구조 면에서 북한은 현재, 과거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유리한 상황에 있다.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의 구 소련과 코메콘 체제와의 교역의존도는 50% 이상이었고, 폴란드와 평가리 역시 약 40% 정도였다.⁴⁹⁾ 따라서 대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에 동시에 체제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급격한 생산과 소비의 감소를 경험해야만 했다. 반면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12%(2000년 기준) 정도로서 동유럽 국가들 보다 훨씬 낮은 편이고, 과거 동유럽 국가와 같이 주변국들의 생산과 소비의 감소로 인한 수출시장의 붕괴 위협이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남한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동유럽보다는 우월한 외부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 국가의 경우를 보면 체제전환 이전에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을 한 국가들은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더 자율적이며, 시장제도에로의 적응이 빠르고, 경제개혁의 성과 역시 빠르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평가리와 폴란드이다. 이들 국가들은 1980년대에 이미 상당 부분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했을 때 다른 동유럽의 체제전환국에 비해서 경제 주체들의 시장경제로의 적응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반면 구 소련과 루마니아는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체제전환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불안정의 정도도 심했다. 따라서 북한은 시장으로의 전환 이전부터 경제

광공업 25.6%, 기타 부문 43%).

49)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특구 등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이 시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험은 시장경제로의 제도에 빠른 적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4. 끝말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를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과정과 비교·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들은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했던 조치들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은 그 동안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 오다가, 경제체제의 붕괴로 인해 새로운 경제운영 방법을 새롭게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 당국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모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에서 찾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개혁정책에서도 보았듯이 사회주의적 제도와 틀 내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이러한 경험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 이전과 이후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해 봄으로써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중국, 베트남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개혁의 차이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말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이전까지 생산재에 대한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개혁 초기부터 사적 소유권의 확대와 시장 허용을 통해서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던 중국 및 베트남의 개혁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개혁만 보더라도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언론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였으나, 실생활에 중요한 경제활동, 영업, 직업선택 그리고 계약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 경제적 성과는 그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이것은 왜 구 소련에서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문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듯이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경제 주체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물질적 공급의 개선에 기여할 수 없었다.

북한 당국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그 어떤 정치적 슬로건이나 동유럽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으로는 경제적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개혁에서도 보았듯이 시장을 보장하는 것이 다른 어떤 민주화 정책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에 있어서도 개혁 초기에는 그 어떤 민주주의나 정치적 실험보다도 시장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경제적 기적은 경제적 자유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대 경제사와 1990년대 이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 이후의 경제적 성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⁰⁾ 북한의 경우도 오직 시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이 북한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당국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재산을 허용하여 시장을 도입하고, 국내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50) 이에 대해 E. L Jones, *The European Miracle, Environments, economics, and geopolitics in the history of Europe and Asia*(Cambridge, 1981), 또는 R. Raico, "The European Miracle and European Liberalism", A Paper for the Wirtschaftspolitisches Seminar of the University of Cologne(1991) 참조.

북한의 원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화폐 및 금융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제도들은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당국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오직 1990년대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뿐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대안 모색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형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더라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점들이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점에서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 운영상 유사한 면이 많으나,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공식적 제도(법률 등)와 비공식적 제도(문화, 관습, 전통, 역사 등)의 상호작용에 의한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발전경로에 있는 북한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정책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이러한 점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동유럽의 경제개혁 사례는 북한에게 좋은 개혁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새 세기 경제관리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 『조국』, 통권 76호(2002).

<2차 자료>

김광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경제시스템”,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rategy*, Vol. 25, 『충실경영경제연구』, 제25집(1995).

김용복, “주요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한국은행 조사연구 자료 99-17, 1999).

박용주, “북한 경제 체제전환 예상모형과 주요 과제”, 『북한조사연구』, 제3권 제1호(1999).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서울 : 해남, 2002).

정여천, “구소련의 경제체제”,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비교경제체제론』(서울 : 박영사, 1997).

정태연 외,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추진상황』(서울 : 한국은행, 1995).

정형곤, 『체제전환의 경제학』(서울 : 청암미디어, 2001).

조명철 · 한정숙,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정책이 남 · 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여름호(1999).

『월간조선』 1월호(2003).

Becher, Jürgen and Richter, Horst, *Planmäßigkeit und Ware-Geld-Beziehungen in der Entwickelt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Berlin : DDR, 1986).

- Brus, W., *Funktionsprobleme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Frankfurt/M, 1971).
- Embinski, P. H., *The Logic of the Planned Economy, The Seed of the Collapse* Oxford : Carendon Press, 1991).
- Grundfragen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sführung in der Volkswirtschaft der DDR*, in Einheit(DDR, 1985).
- Hamel, Hannelore, "Sozialistische Unternehmenskonzentration und Managerverhalten : Die Kombinatsbildung in der DDR als Effizienzproblem", *Anreiz-und Kontrollmechanismen in Wirtschaftssystemen I*, hrsg. v. G. Hettkamp(Berlin, 1981).
- IMF, *Transition Economies :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Nov., 2000).
- Jeong, Hyung-Gon, *Privatisierungspolitik im Transformationsprozeß*(Shaker Verlag, 1998).
- Johnson, J., "Should Russia Adopt the Chinese Model of Economic Reform?",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27. Jg. Cologne(1994), Nr. 1.
- Jones, E. L., *The European Miracle, Environments, Economics, and Geopolitics in the History of Europe and Asia*(Cambridge, 1981).
- Kornai, J., *Economics of Shortage*(Amsterdam, 1980).
- _____,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 Visions, Hopes, and Re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1986).
- _____,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System of Communism*(1992).
- _____,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Vol. 3(1986).
- Kosche, M., *Eigentumstransformation in postsozialistischen Wirtschaftssystemen*(Köln, 1993).
- Lipton, D., Sachs, J., "Creating a Market Economy in Eastern Europe :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1/1990).

- Marer, P., Arvay, J., O'Connor, J., Schrenk, M., & Swanson, D., *Historically Planned Economics – A Guide to the Data*(Washington D.C. 1992).
- Mittag, Günter, "Theoretische Verallgemeinerungen der Erfahrungen der Entwicklung der Kombinate für die Leistungssteigerung in der Volkswirtschaft, insbesondere bei der Nutzung der qualitativen Faktoren des Wachstums", *Wirtschaftswissenschaft*(DDR), Heft I(1984).
- Raico, R., "The European Miracle and European Liberalism", A Paper for the Wirtschaftspolitisches Seminar of the University of Cologne(1991).
- Schlueter, R., *Wirtschaftsreformen im Ostblock in den 80er Jahren*(Paderborn, 1988).
- Sik, O., Weg, Der dritte,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Theorie und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Hamburg, 1972).
- Thalheim, K. C.,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r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3. Aufl.(Berlin, 1988).
- Thalheim, Karl C., "Ordnungspolitische Aspekte der Heutigen Wirtschaftspolitik der DDR", *Deutschland Archiv*, Heft 5(1984).
-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 Watrin, Ch., "Vom sozialistischen zum privaten Eigentum", *Hamburger Jahrbuch für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politik*, 35(1990).
- Winiecki, J., "Are Soviet-Type Economies Entering an Era of Long-term Decline?", *Soviet Studies*, 38. Jg.(1986), Nr. 3.

〈Abstract〉

Economic Reform in the Socialist System of Eastern Europe and North Korea

Hyung Gon Jeong (The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Policy)

This thesis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vis-a-vis the economic reform in the socialist system of Eastern Europe. The recent assessment of economic management and improvement in North Korea are similar to the one previously taken by Eastern European countries to overcome the inefficient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Unlike the assessment of North Korea, the experiments made by China and Vietnam tried to improve economic productivity and solve the inconsistencies of the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by expanding private properties and implementing the market system. The economic reform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late 1980s proved that the current socialist system of North Korea cannot resolve the country's economic problems. As attested in Chin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 radical reform of systems is required to enable North Korea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As such, the guarantee of economic freedom for inhabitants is also essential. Economic freedom suggests that a certain amount

of private property is recognized by the market system. It secures freedom in contracting, price setting, and entering the market and activates competitions in the market. Likewise, monetary and financial reforms are indispensable to the stable value of Won. Said reforms will greatly contribute to enhancing economic efficiency and reducing trade expenses, as manifested in the new economic system of the Eastern European socialism. Basic conditions to solve economic problems will be established after said systems are introduced in North Korea.

Key Words : North Korea, Socialist System, Economic Reform, System Transformation